

“호남 눈물 닦아주려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대선공약 실천을”

민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광주 중기인 ‘지역산업 발전 간담회’

광주 R&D특구, 국비지원 대전의 6분의 1도 안돼

금형센터 지어놓고 장비 지원은 안해 사실상 방치

“수백억원짜리 금형센터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 장비가 없어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대전보다 뒤늦게 광주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놓고 국비지원은 대전의 6분의 1도 안됩니다. 열악한 광주의 산업인프라 등을 감안해 최소한 차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주관으로 1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기업인들과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선 타지역보다 열악한 광주의 경제 인프라 지원을 부탁하는 읍소형 민원이 쏟아졌다.

한국정밀 김성봉 대표는 “최근(지난 6월) 광주 첨단지구에 금형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시험생산 지원을 위한 ‘하이테크 금형센터’가 완공(160여억원)됐지만, 정작 중요한 연구개

발·시험생산 장비(국비 163억원)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재 광주의 금형산업 매출은 연간 1조원에 이르지만, 신기술 개발을 미룬다면 중국 업체들에 추월당해 결국 다 망할 수도 있다”며 빠른 지원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또 지난 2011년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

링크옵티스 최용원 대표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에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처럼 일부 연구인력의 급여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특히 “올해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금은 70억원으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450억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차별을 거론하기도 했다.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유영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시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자동차산업 입대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육성, 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LED 생산업체인 프로맥 정창구 대표는 “광주(光)산업은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국내 최고의 광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포토닉스 컨버전스 2017’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국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토닉스 컨버전스 2017 프로젝트란 2018년까지 7820억원을 들여 LED 조명보급 확대 등 8개 광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유영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시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자동차산업 입대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육성, 유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망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도 “박

근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우윤근, 김동철, 오영식, 부좌현, 전정희, 임내

현 의원은 강운태 시장과 첨단지구 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전북 예산으로 이동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광주 국회의원들 손잡고 ‘발등의 불’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

국회서 정책간담회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장병완,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임애현, 박주원, 오병운 의원과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광주시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2차 심의와 미결·생점심의에서 지역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부처 통과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미반영된 광주의 현안 사업은 7건 446억원으로 ▲치과용 소

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5억원)

▲광주 R&D특구 연결도로개설(10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71억원) ▲아리랑브랜드 공연프로그램 개발(3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53억원) ▲동광주IC~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9억원) ▲국립 암생동물 보건연구원 광주설립(3억원) 등이다.

또 대선공약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광주의 주요 사업은 11건 7410억원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10억원) ▲디지털콘텐츠사업 클러스터 조성(150억원) ▲지산유원지 주변 오감한국마을 조성(10억원)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1억원) ▲광주도심 하천 생태복원(30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48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순환도로 개설 2구간(95억원) ▲한국 탄소중

립연구원 광주설립(10억원)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센터 조성(100억원) ▲5·18아카이브 구축(87억원) 등이다.

이 밖에 부쳐 요구사업 중 기재부에 일부만 반영되고 누락된 사업(비)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 등 9건 1963억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오령국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과장 등이 기재부에 상주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병천 재원조정답당은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여·야 예결 위원 등과 협력을 통해 내년도 광주의 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Vitamin House
www.vitamin-house.com

건강을 PLUS+ 하세요!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비타민 B군 일일권장량 100% 함유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설탕,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최윤영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상담전 진료과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구입문의 1588-8529

전두환 처남 이창석 ‘조세포탈’ 영장 검토

검찰, 장남 재국·처남 재용 등 자녀들 다음주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62)씨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한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이씨를 소환해 14시간55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13일 오전 0시45분께 둘러 보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던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조사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재용씨의 땅 거래 및 담보 제공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두 사람에게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재용씨의 회사 운영과 금융 대출 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처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자녀들도 이르면 다음 주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고려 중이다.

/연합뉴스

“30억 콘도 네가 가져라” 노태우·前 며느리 이상한 소송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전 며느리 신정화(44)씨가 콘도 소유권을 두고 상대방에게 지분 소유권을 미루는 ‘기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시가 30억원대의 콘도에 대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신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대해 법

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6월 19일 자신과 재현씨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콘도 소유권과 관련, 절반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를

/연합뉴스